

## 제2차 장관-정책고객과의 대화 결과

### 1. 개 요

- 일 시 : 2004. 11. 10(수) 11:00 ~ 14:00
- 장 소 :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
- 참석자 : 31명
  - 외부 : 민화협 등 사회·문화분야 교류단체 대표자 23명
  - 통일부 : 장관, 통일정책실장, 사회문화교류국장 등 8명
- 행사 내용
  -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
  - 교류협력 사업 관련 애로 및 건의 청취

### 2. 정책고객 주요 건의내용

- 내년 광복 60주년, 6·15 5주년 등을 상징하는 민간 행사 및 남한 단체의 방북 시 경비지원, 그 외 통일교육 등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
- 장관 취임이후 조문 문제, 탈북자 문제 등으로 민간단체의 교류도 경색된 측면이 있음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
- 교육용 기자재·이동식 검안차량 지원, 남북 단체간의 선물 교환, 삼지연 공항 피치 지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
- 기타 민족정기 수호 및 통일 후의 화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

### 3. 장관 답변 요지

- 현재 당국간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초를 이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.
- 내년은 광복 60주년, 6·15 5주년 등 역사적인 해이므로 남북교류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. 정부는 질서 있고 생산적인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.
- 조문문제는 실정법체계·법원 판례·국민정서를 존중,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랬지만 장애물로 돌출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.
- ‘북한이탈주민 몽골 정착촌 건설’ 등은 오보로, 해명 기사를 요구하고,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음. 참여정부는 흡수통일·북한정권 붕괴 등에 적극 반대하며, 화해협력 기초위에서 민족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.
- 교육용 기자재 등 전략물자의 반출입 문제는 우리정부 책임 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, 다만 우리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의 EAR 저촉물품을 스크린 하는 것임.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음.
- 민간교류와 더불어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램. 6·15 정신을 구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.
- 또한 통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을 뛰어넘어 창의성과 유연성을 지닌 ‘열린 통일부’를 지향해 나갈 것임.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바램.